

※ 240114 제주녹색당 당원토론회 ‘선거연합정당 당원 총투표, 알고 투표하자’에서 의견을 나눠주신 채효정 님의 글입니다. 채효정 님은 240107 임시 전국 위원회에 ‘선거연합중단 당원발의 안건’을 제출한 당원 중 한 명으로 강원녹색당 당원입니다.

나는 왜 이 선거연합에 반대하고 있는가 -판단의 근거들

I. 녹색당의 내부 평가와 자기 인식

1. 조직

2020년 이후 지역당 체계 붕괴, ‘조직 붕괴’ 상황.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심각. 서울 대표 지역당인 서대문(서대문, 마포, 은평)도 활동 축소, 서대문은 사고지역당, 비수도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역당은 제주, 부산, 충북, 경북 정도. 사실상 녹색당 자체가 이미 정상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사고 정당’이 된 상황.

2. 당원

1만 당원이라 하지만 당권자 4200명(선거연합 논의 중단 당원발의 과정에서 확인한 수. 선거연합정당 당원대토론회 당시 박제민 서울공동위원장 발제 - 당권자수 3909명으로 보고) 2020년 위성정당 사태 이후 1000명 이상 당원 탈퇴. 당원으로 남아있지만 당비 납부 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당원들 다수. 여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있었는가. 숫자가 아니라 당원의 긍지와 자부심 중요. 많은 녹색당원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운동, 녹색운동 활동하지만 녹색당을 드러내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있었는가. 녹색당원이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이 모든 활동이 녹색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 당의 정치활동은 개별 당원 활동의 총합이 아님. 지금 선거과정은 당원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음. 떠난 사람, 남아 있는 사람, 지켜보고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일지,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고, 냉소와 무관심의 이유를 찾고, 당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는가. 아니면 당원들은 당비 내고 투표하는 ‘정당의 인구’인가.

3. 재정

당권자 수의 감소는 당비 감소로 이어지고, 현재 녹색당은 심각한 재정 위기. 재정 감소는 당 활동 축소로 이어져 악순환. 지역당 상황은 더욱 열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이고, 많은 활동가들이 생계 생업에 종사하며 무급으로 활동하며 지역당 운영. 현재 대표단과 사무처는 이런 재정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연합정당을 고려하며, 원내정당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당보조금을 하나의 해결 대안으로 보고 있음.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에 도움이 될 지는 해가 될 지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재정구조를 보면 알 수 있음. 선거연합정당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터놓고 토론해본 적도 없음.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할 수 있다, 도전해보자’ 하는 것은 무책임함.

4. 역량

현재 녹색당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였다.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금과 똑같은 목표 - ‘진보4당 연합하여 양당정치 타파, 기후정치세력화’를 들고 선거연합 시도했지만 실패. 실패 이유도 지금과 똑같음. 진보당과 정의당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었고, 녹색당은 그 사이에서 정치력 발휘하지 못함. 그때와 지금,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정의당 진보당 입장 차이 그대로고, 녹색당도 새로운 카드 없는 상황. 그런데도 마치 강서구청장 선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진보정당 선거연합 추진.

독자선거 결과는 0.2% 득표로 대참패. 위에서 살펴본 ‘조직, 당원, 재정’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김. 당내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는 공당의 정치적 평가라 할 수 없음.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전국당과 서울시당 모두 전력 집결하였음에도 선거 운동 결합했던 당원 수는 ‘연인원’ 50여 명에 불과.

5. 전략지역구

강서구 전략지역구는 완전 실패. 후보 인지도, 후보의 강서구 지역 기반, 당원 기반, 리더십, 의제 발굴 역량, 준비 부족의 선거 등 당시 드러난 문제는 현재 총선 전략지역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전략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다른 조건이 있는가. 여성-청년 지지층을 공략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녹색당 신지예’의 후과가 다른 곳보다 더 크게 남아있는 곳이 서울-마포. 마포구는 ‘신지예의 마포’와 싸우는 것이 더 큰 관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였는가. 몇 년 씩 공들여 표심 닦는 다른 당 후보들이 있는데, 선거 몇 달 전에 급조해서 나온 후보가 아무 승산 없고, 확률 0%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처럼 전략지역구 전략을 짜고 있음. 지역구 선거 가망 없지만 나가는 솔직한 이유는 비례후보만 내면 정의당에 손가락 없어 의석 얻으려는 ‘위성정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연합정당이 ‘위성정당’ 아니라는 알리바이 위해서. 마포구 선거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당내에는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계획 들어본 적 없음.

II. 외부의 평가와 분석

1. 진보 정당 내 양당 구도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에서 결의한 ‘진보정당과의 선거연합’에서 가장 큰 중심축은 진보당과 정의당. 두 당이 합의하지 못할 시 진보정당 선거연합은 무산되는 것.

진보당 : 각자 당 밖에서 제3의 플랫폼 정당을 제안.

정의당 : 정의당 신당을 플랫폼으로 나머지 정당이 들어올 것을 제안.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연대하며 민주당에까지 선거공조 가능성 열어두고 있음. 정의당도 지역 구 후보에서 민주당과 공조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상태. 2020년 민주당 위성정당 추동했던 시민사회 원로회의는 이번에도 민주당 빅텐트론으로 양당 압박하며 비례명부 공유 없는 지역 구 후보 단일화를 타협안으로 제시. (ex. 심상정 지역구에 민주당 불출마) 이 안은 정의당으로서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민주당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인데, 이후 판세를 보아가며 유불리에 따라 하겠다는 뜻. 양당 모두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전략적 선택 하고 있고, 녹색당도 이 틈바구니에 놓여 있음.

‘기후정치세력화’는 현재 2020년의 ‘그린뉴딜’만큼도 상징성도 명분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녹색당은 이 틈에서 기후정치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정의당과 연합정당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협상 중재자의 위치를 스스로 버리고, 진보-정의라는 진보정당 내 양당 구도에서 한 편에 서고 있는 상황.

2. ‘강력한 선거연합’도 ‘정치세력화’도 실패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 11%, 정의/진보/녹색/노동 합친 것보다 많음. 이것을 정치보수화에 대한 좌절과 대중에 대한 실망으로 받기 전에, 먼저 선거연합정당이 아무런 감동도, 희망도 주지 못하고,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 한마디로 흥행 대실패 - 직시하고 평가해야 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함.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선대위는 ‘진보정당 및 기후녹색운동과의 강력한 선거연합을 통한 기후정치세력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당원들과 함께 현실을 직면하고 노선을 수정하고 대안을 찾기보다, 객관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안 없이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길을 가자’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의지적인 판단으로 정해놓은 답을 향해 가고 있음.

진보정당과의 강력한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기후·녹색운동’과의 강력한 선거연합을 통한 기후정치세력화도 차질을 빚고 있음.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회운동과의 연대’로 표현된 것이 ‘기후·녹색운동’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우려했던 대로 폭넓은 사회운동이 아닌 2개 기후운동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과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는 14개 환경단체로 축소되었음. 선거연합의 방식도 단체 대표단과의 만남과 간담 수준에 그쳐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멀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3개 단체와 면담했고, 3개 단체는 사실상 거부했으며, 나머지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지만, 이미 진보정당 선거연합이 결렬된 상태에서 이 단체들과 선거연합 어려운 상태. 공동선대위 수준도 구성하지 못하는 정도의 대표단 면담을 ‘강력한 선거 연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결코 정치세력화 할 수 없음. (참고로 기후정의동맹에서 면담을 반려한 것은 녹색당의 기후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화의 전략 없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예방과 인사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3. 선거연합의 방식

이런 상황에서 연합의 내용과 원칙이 먼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당명, 대의기구 구성 비율, 대표단 파견 등 실무적 논의로 연합 추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진보당이 정의당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호혜적이고 평등한 연합의 형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 진보당은 탈당 후 정의당플랫폼으로 입당하여 선거를 치르고 다시 탈당하고 복당하는 복잡한 과정 거쳐야 하나 정의당은 그런 과정 없이 당명만 바꾸면 대표단, 사무처, 당원 모두 자동으로 신당으로 당적 변경됨. 이런 이유로 다른 정당들이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정의당 제안을 녹색당만 수용한 것임.

녹색당이 강령과 정책을 연합정당 안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대위와 사무처, 전국위 등 당의 지도부가 모두 탈당하여 신당에 입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녹색당 내 의결 기구가 작동 불가능 상태가 됨. 파견된 공동대표와 대의원들이 당내 지위도 문제가 됨. 한마디로 당내 리더십과 대의 기구가 모두 공백이 되어 선거과정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걸 해야 할 주체들이 없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는 남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위원이 아닌 다른 사무처 활동가와 활동당원을 대신 파견하는 안도 거론되는 중. 하지만 연합신당의 대의기구 안에서 녹색당을 대변하며 논쟁하고 토론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연합 논의 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전국위원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파견된 일반 활동당원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리고 그렇게 임의로 파견된 당원(이 더 이상 아닌 분)이 녹색당의 '대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당규'를 만들어서 탈당한 대표와 선대위원, 전국위원의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런 행위는 모두 당헌을 위배하는 대단히 심각한 행위이며, 당헌개정을 위한 당원총투표를 또다시 거쳐야 하는 등 무리수가 따름. 이처럼 하나의 꿈수는 또다른 꿈수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당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과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것. 기후정치를 위한 선거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연합정당에서 비례의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해 전국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침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이 사실을 당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찬반으로 총투표 진행.

4. 선거연합의 내용

파견에 따른 문제가 연합의 형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충돌이라면, 연합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녹색당과 정의당의 당론이 충돌할 때, 두 당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최근 '가스민영화법'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양당이 보인 입장 차이가 대표적 사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와 선대위는 공동성명으로 가스민영화법 통과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정의당 국회의원은 전원 기권표를 던짐. 과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당시 기권표를 던진 용혜인 의원과 환경운동 출신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 등에 대해 녹색당은 강력히 비판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정의당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만 하고 넘어감. 당내에선 기권은 찬성이 아니라고 해석하거나, 입장 없음이라고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음. 가덕도 투표 때와 다른 이와 같은 반응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기후정치'를 선거연합의 목표로 내걸고도, 정작 현실에서는 연합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되고 기후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임. 이번 사례는 우연하고 사소한 에피소드가 아니며, 녹색당과 정의당의 기본 노선에 깔린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함. 정의당 정책실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권’으로 정리한 것은 민영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의 필요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 국가 안보와 생태가 부딪칠 때 정의당은 국가 이익을 녹색당은 생태적 정의를 우선함. 녹색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지 않음.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 사회’는 녹색당의 2024총선 정책기조이고, 자원안보를 더 중시하면서 민영화를 ‘우려할만한 일’로 보는 정의당의 입장과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음. 여기에 대해 녹색당 선대위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나, 아직 무응답. 이런 문제들은 선거연합정당 창당 이후에도 계속 나타날 것임.

III. 총선 이후에 대한 계획

두 가지 가능성

(1) 원내 진출 실패 -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평가의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인가. 당내 굳건한 지지 속에서 추진했어도 후폭풍이 클 것인데, 작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해서 (당권자 여론조사에서 찬성 %, 반대 %) 추진 과정에서 선거연합 중단 당원 발의까지 있었던 것을 밀어붙인 결과.

(2) 원내 진입 성공 -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예상. 현재 녹색당의 규모와 예산을 볼 때 국회의원 한 명이 당보다 훨씬 더 큰 조직, 자원, 예산을 운용. 이 때 당은 의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우리는 잘 할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음. 녹색당은 국회의원 한 명에 의해 대표될 것이고, 그의 활동에 당 활동이 빨려들어 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함. 중앙정치의 ‘공중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당의 체질도 변해갈 것. 용혜인 의원은 반면교사의 사례. 용혜인 당선 후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지만 당활동가들이 모두 국회 보좌진으로 배치되고 기본소득 운동은 사실상 중단. 여러 활동 했지만 자기 당이 내세운 기본소득 법안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함. 4년 임기가 끝난 이후, 지역과 당원 기반 없이 또다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녹색당 국회 진출해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 초래할 수도 있음. 과정은 결과보다 항상 그 이상으로 중요함.

IV. 도래할 것은 선거보다 더 긴 시간

진보정치는 선거 이후의 시간, 도래하고 있는 엄혹한 시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가. ‘IMF보다 더 큰 것’이 올 거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고, 이미 대중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IMF는 예고 없이 왔지만 다가오는 위기는 예고를 하고 오고 있는 중. 그러나 거대양당은 물론 진보정당도 그에 대한 플랜을 내놓지 않고 있음. 그걸 준비하는 것이 ‘기후정치’. IMF 사태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기업이 파산하고, 은행이 부도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하고, 가게들도 다 문 닫고 다 망했다. 해고, 실업이 넘쳐나고, 자살을 하고, 돌봄에 구멍이 났다. 지금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IMF 때 없던 위기까지 가세한다. 인플레이션과 부채 위기. 의료, 교육, 돌봄의 붕괴.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까지. IMF 탈출구였던 금융, IT, 부동산이 지금은 모두 뺏겨져 버린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녹색당의 강령과 정책은 여전히

민중이 기다리는 ‘정치의 언어’라기 보다는, 총선이라는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의 답안지 같다는 생각이다.

V. 선거도 안하고, 그러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선거를 안 하면 정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 선거, 의회’라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정치에 갇혀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와 공백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 말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없다. 이런 사고는 ‘반정당의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만들어진 녹색당마저도 낡은 기성정치, 효력을 다한 서구의 대의정치 문법에서 해매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당내 정치인들도 이런 사고 편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말로는 양당정치, 기성정치와 결별하자고 하면서 기성정치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정당(party)’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묻자. 지금 이 시기에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정당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그건 ‘원내에 있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정당’, ‘우리 편에 있는 정당’일 거라고 생각한다. 현 정세는 정치도 붕괴하는 시기다. 고도성장기, 정치안정기에 만들어진 서구적 합의 정치의 시효는 끝난 지 오래다. 도래하는 파시즘, 도래하는 전쟁, 도래하는 파국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거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할 일이 보일 것이다. 선거만 안 해도,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